

경제위기 이후 21세기 세계 문화질서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2011년 3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1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경제위기 이후 21세기 세계 문화질서

김준석
가톨릭대학교

I. 경제위기,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상대적 쇠퇴, 문화질서의 변환

경제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련 짓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세계 문화질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혹은 미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은 매우 희미하게 인식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위기의 발발과 지속, 그리고 이것이 가져온 미국주도 세계질서의 상대적인 쇠퇴는 문화 분야에서 잠재적으로나마 일정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고, 또 그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흐릴 뿐이다. 이는 사실상 정확한 답변이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본 장에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모든 이들이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만큼의 것들을 문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문화는 문명, 종교, 지식, 정체성, 가치, 규범, 넓은 의미에서의 제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초반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세계 문화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 경제위기로 인한 국제적인 힘의 분배에서의 변화는 이전까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던 문화와 열세에 있던 문화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위에 있던 문화는 힘의 축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움츠러들면서 좀 더 큰 결속력을 보이게 되고, 열세에 있던 문화는 힘의 상대적인 증가와 함께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 간의 상대적인 위상의 변화가 전면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 정체성, 세계관이 긴장 속에서 일정하게 공존하는 상태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9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큰 관심을 모았던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 충돌론'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그 이론의 단순성과 결론의 과격함으로 인해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해 더 이상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그에 제기된 수많은 비판이 문명충돌론을 재론하는 것을 터부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제기된 모든 단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명충돌론은 여전히 중요한 이론이고, 적어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문화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매우 유용하다. 특히 많은 이들은 헌팅턴이 문화/문명을 본질주의적인 관점(primordialism)에서 이해한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이론을 거부해 왔는데, 그러한 비판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문명의 '물화'(物化)에 일방적



으로 반대하는 사회학적, 포스트모던적 반(反)본질주의 문화개념이 과연 국제문화의 분석에 적합한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피터 카첸스타인(Peter Katzenstein)이 헌팅턴 식의 본질주의를 상당히 완화된 형태의 문명 개념을 국제정치 분석의 중요한 개념 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첸스타인에 따르면 단일한 문명적 핵심을 가정하는 대신 문명의 중층성, 다차원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의 문명 내에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할 경우 문명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과학 개념일 수 있다. 우리는 카첸스타인의 접근법을 통해 헌팅턴식 본질주의와 포스트모던적 탈본질주의 사이의 적절한 타협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Katzenstein 2010).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주로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미국과 중국이 세계문화질서 내에서 각자의 영향력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한다. 특히 양국 간 ‘문화 경쟁’을 ‘문명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을 둘러싼 경쟁의 차원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서구 문화권의 변환: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북미와 유럽 대륙의 서구 문화권 국가들은 보편적 문화의 전파자, ‘문명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의 확산자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 전반적인 양상에 관해 어느 정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적어도 20 세기 이전까지 세계 여러 지역 간 문화의 전파는 서구에서 비서구지역으로의 일방통행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국가들은 문명 표준국으로서 ‘바람직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규범들을 비서구권 국가들에 제시했고, 이들 비서구권 국가들은 그러한 규범들을 때로는 강압과 체념 속에, 때로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16~17 세기 유럽에서 처음 등장하여 자리 잡은 근대적 국제정치 체제의 규칙과 규범 역시 유럽 열강들의 해외진출과 함께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 비유럽권 국가들에 확산되었다.

이러한 서구 문화권 국가들의 문화 전파자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은 20 세기 들어 양차 세계대전의 발발, 미소 간 냉전 대립, 탈식민화와 제 3 세계 운동 등의 영향으로 일정 정도 잠식되고 약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20 세기 말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회주의에 대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우위가 확인되고 미국이 국제질서 주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함에 따라 서구 국가들은 다시 서구식 문명표준의 확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0 년대 이래 효과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긴축과 무역자유화, 사유화와 탈규제 등의 ‘구조조정 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정책 모델로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은행(World Bank)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반(半)강제적으로 각 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거나 혹은 주로 미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공동체의 지적 헤게모니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보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서구 문화권 국가들은 탈냉전 시대 들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rule of law)와 같은 제도와 규범의 확산을 시도해 왔다. 특히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은 많은 서구 국가들의 중요한 외교정책 어젠다로 채택되었다. 민주주의의 확산은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 대통령 혹은 그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미국의 외교정책 전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고, 탈냉전 시대 들어서는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가 그러한 전통의 충



실한 계승자로 자처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화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증진은 많은 유럽 국가들의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1990년 냉전이 막 종언을 고하고 있던 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Commission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 회원국 정상들은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Charter of Paris for a New Europe)을 채택하여 ‘민주주의를 우리 회원국들의 유일무이한 정부형태로 확립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나토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민주주의를 새로운 회원국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다수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신에 일정 부분 기여하기도 했다.

서구 문화권 국가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명 표준을 옹호하는 것이 단순히 이들이 더 많은 경제적 지배 혹은 더 많은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기 원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Ayers 2009). 문명 표준의 전파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들 서구 국가들에 의해 하나의 ‘문화 권력’으로 행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Hobson 2008; Clark 2009). 즉, 서구 국가들의 문명 표준은 문명화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국제 규범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되기를 원할 것이다. 혹은 국제사회의 규범적 통합이 보다 더 심화되는 과정으로 간주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비서구권 국가들의 관점에서 서구 국가들의 문명표준 제시는 명목상으로나마 엄격하게 유지되었던 국가들 간 평등의 원칙을 포기하고 배제와 차별의 원칙을 도입하려는 조짐으로 읽힐 수 있다. 혹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문명화된 사회와 야만적인 사회의 구분을 부활시키려는, 국제사회를 소수의 특권적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로 구분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차원의 금융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또 미국의 패권적 지위의 잠식이 그러한 경제위기와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면서 서구 문화권 국가들이 문명 표준을 제시하는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20여 년 간 추진해 온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 정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하면서 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전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민주화임을 천명한 이라크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군사력의 사용조차도 용인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세적인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정책의 대상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선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반(半)봉건적인 독재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민주주의와 인권원칙의 확산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다. 반면에 현재 중동에서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민주화’된 국가라는 점이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물론 여기에서 외교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갈등과 절충이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어떤 국가도 이상주의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국가이익을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은 그 레토릭의 강력함이 실제 정책 내용과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그리고 여기에 정책의 주체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점이 더해져서, ‘오만하고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초당적인 합의사항이던 민주주의 증진정책이 정책의 과도함을 비판하는 민주당 중심의 정치세력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부담을 짊어지더라도’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공화당 중심의 세력 양자 간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는 점도 매우 뼈아픈 변화로 꼽히고 있다(Rachman 2009, 121).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정책의 한계가 오직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특별한 성격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는 미국 외교정책의 대외환경의 변화에 기인한다. 다른 무엇보다



도 ‘제 3의 물결’로 상징되는 전 세계적인 민주화의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지난 10년 간 민주주의의 확산은 문자 그대로 ‘중단’되었다. 이제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역사발전의 당연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민주주의의 무한정한 확산과 증진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민주주의 실험은 그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미 미군 주력이 철수를 완료한 이라크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군을 계획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Carothers 2007, 27-28). 먼저, 경제적인 여건이 민주주의의 확산에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많은 개도국에서 시장주도 경제개발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둘째, 과거에는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다양한 정책 도구들이 존재한 반면, 오늘날 상당수 개도국들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서구 국가들의 압력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름의 ‘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일종의 ‘학습효과’인 셈이다. 셋째, 민주화를 수반하지 않는 발전 모델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비교적 순탄한 경제발전과 세계 경제금융위기의 와중에서도 놀라운 성장의 동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존재로 인해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확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두 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서구적 문명 규범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점차 자신들의 독자적인 발전노선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2008년 8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그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은 상이한 문명표준 간 갈등과 경쟁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러시아와 중국 이들 두 국가는 다른 많은 개도국들에게 서구식 발전모델의 유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로버트 케이건(Robert Kagan)은 이러한 변화를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역사의 종언이 종언을 고하고’, ‘민주주의’와 ‘전제주의’(autocracy) 간의 이념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Kagan 2008; 2007.).

이상과 같은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시대 미국은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심각한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국내사안의 대처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일단 민주주의 증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상당한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적인 성향의 학자들과 정책자문가들은 이미 그러한 경향이 노골화되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2009년 카이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민주주의의 증진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으며, 이 논란이 이라크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가나 방문에서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급한 이유는 없습니다. 각 국가는 각자의 방식과 전통에 따라 민주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미국은 특정한 정부 형태를 다른 국가들에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평화와 안전의 증진, 지구환경의 보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제경제의 증진을 미국 외교정책의 ‘네 가지 기둥’으로 지칭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헨리 나우(Henry R. Nau)는 이를 민주주의 확산이 더 이상 전 지구적인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한다(Nau 2010).

실제로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유보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공세적인 민주주의 증진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Newsweek July/2008). 2007년 <뉴욕타임즈> (The New York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증진하는 것은 식



량, 주거, 일자리 등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The New York Times* November/04/2007). 그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증진에 대해 매우 점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 오바마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다. 2010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 국내에서 그 가치에 따르는 삶을 실현함으로써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제도, 시민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발전과 정치적인 진보 사이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매우 현실적인데,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 따라 그러한 가치들의 실현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어떠한 정부 형태를 다른 국가들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장기적인 안전과 번영은 우리를 우리의 적들과 적대적인 정부와 잠재적인 경쟁자들과 구별되게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보편적인 가치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취약한 민주주의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36).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스타일 혹은 접근방식의 문제일 뿐 이를 포스트 부시 시대의 미국이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이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가치와 규범의 확산을 주요한 대외정책 어젠다에 포함시키는 미국의 전통은 현 정부 하에서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미국의 외교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증진이 ‘올바른 일’(the right thing to do)이라는 합의는 크게 도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부정적인 징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정부가 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가장 효과적으로 호응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제도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더라도 중동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상당수 일반 시민들이 민주주의 제도의 채택과 도입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Fukuyama and McFaul 2008, 33; Homolar-Riechmann 2009). 미국 대외정책에서 문명표준으로서 민주주의의 호소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들어 미국의 일부 외교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협조체제’(Leagues of Concert) 혹은 ‘민주주의 연맹’(League of Democracies)의 결성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의 결속력 있는 연합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보 달더(Ivo Daalder)와 제임스 린제이(James Lindsay)에 따르면 이러한 민주주의 연합체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갖는다. 첫째, 민주주의 협조체제는 공통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협조체제는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협조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Daalder and Lindsay 2007, 55).

이러한 제안이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이라는 기존의 외교정책 목표를 포기하거나 일정 부분 완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존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와 앤-마리 슬로터(Ane-Marie Slaughter) 등이 지적하듯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정책결과에 책임을 지며, 시민들의 권



리를 존중하는 정부(Popular, Accountable, Rights-Regarding Government)라 부르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에 비추어 여전히 필요하고 바람직하다(Ikenberry and Slaughter 2006, 20). 다만 문제는 단극적 국제질서의 상대적인 쇠퇴와 더불어 미국은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제도화된 협력의 틀’ 안에서만 효과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Ikenberry and Slaughter 2006, 22). 또 다른 문제는 그러한 협력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존의 국제기구인 유엔과 나토가 쉽게 극복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여전히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 있고, 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베스트팔리아 주권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오늘날의 초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협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토의 경우에는 군사동맹으로서의 성격으로 인해 안보 이슈 이외의 이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동맹의 지역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Daalder and Linsay 2007, 51-52).

민주주의 협조체제의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이러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합체가 비민주주의 국가들에게 민주화의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문명화된 국가들’ 클럽의 문호를 개방한다면 비회원국들은 가입을 위해 민주주의의 제도와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클럽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명성’과 ‘위신’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21 세기의 국제사회에서 ‘문명화’는 여전히 그 자체로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적 규범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협조체제에 관한 담론은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던 2006 년 아이켄베리(G. John Ikenberry)와 슬로터(Arne Marie Slaughter) 등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을 꾸준히 주장해온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담론이 로버트 케 이건(Robert Kagan)과 같은 네오콘 이론가들의 지지를 받았고, 2008 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 인(John McCain) 상원의원의 대외정책 공약으로 공식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치지형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교적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 일차적인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노선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또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은 이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민주주의의 무한정한 확산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협조체제에 관한 현재의 담론은 서로 상충하는 주장과 전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민주주의 협조체제는 기존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협조체제는 민주주의의 확산 가능성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명 표준을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협조체제 정책은 상대적인 힘의 약화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대안일 뿐만 아니라 문화권 간 경쟁과 대결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 국가들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현재 서구 문화권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이들 국가들이 어떤 모습으로 위기의 터널을 빠져 나올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세계 문화질서의 미래와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동아시아의 부상,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서구인들 사이에 자신들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의구심과 문명 표준을 둘러싼 경쟁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Moisi 2010, 162-184). 아마도 이러한



의구심과 두려움은 세계질서 주도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온 미국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권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 가지 시나리오는 민주주의 협조체제론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듯이 민주주의라는 문명표준을 공유한 국가들 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문명적 정체성의 차원에서 고려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경제위기가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점차 그 실현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과연 미국이 민주주의 협조체제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Schlesinger 2009, 13). 예를 들면 인도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협조체제에 기꺼이 참여하여 협력할 것인가? (Nau 2008; Rachman 2009) 국제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매개로 한 미국의 규범적 리더십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주의 협조체제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그러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기에는 경제위기가 드리운 그림자가 너무나 짙다. 앞서 지적했듯이 오바마 행정부는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다른 여러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민주주의 진영 대 반민주주의 진영의 대립구도를 초래할 수도 있는 협조체제론은 너무나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가치와 규범의 문제를 대외정책에서 전적으로 배제하는 전통적인 현실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증진과 확산의 문제를 이해하는 입장, 규범적 가치의 대의를 인정하되 그것이 현실적인 차원의 외교정책 목표와 공존해야 한다는 다소 절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규범적 이익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되 여건이 무르익어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결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보수적 국제주의’(conservative internationalism) 혹은 ‘기회주의적 이상주의’(opportunistic idealism)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Nau 2008; Rachman 2009).

III. 동아시아 문화권의 변환: 중국적 보편주의의 등장?

미국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문명표준의 제공자로서의 자국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위협받고 있고, 특히 민주주의의 확산과 증진이라는 대외정책의 오랜 목표를 예전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는 사이, 문명표준의 제정을 둘러싼 국제정치무대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대적인 지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제국들이 세계 경제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그리고 인도의 경우 경제위기는 강대국으로의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희망과 자신감의 문화’라 부를 만한 것이 점차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희망과 자신감의 대부분은 서구권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헤게모니 하에서 언제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이 서구와 동등한 위치에 서거나 심지어는 서



구를 따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서구 국가들이 장악해 온 세계 문화질서 내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몫을 늘려나가려는 진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등 서구문화권 국가들이 독점해온 문명표준 제공자로서의 위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열망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이미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해 중국이 국제적 차원의 문화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지난 2004년 출판되어 큰 관심을 모았던 《천하체계(天下体系)》의 저자 자오팅양(趙汀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중국인들의 지적 각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의 지식 체계가 세계적인 지식 체계를 세우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 보편의 지식 체계를 생산하는데 참여하지 못하여 지식 생산의 대국이 되지 못한다면, 경제 규모가 거대하거나 물질 생산의 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소국일 것이다 ... 세계를 책임지는 것은 단지 자신의 국가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세계를 책임지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삼아 새로운 세계 이념과 세계 제도를 창조하는 것이다(자오팅양 2010, 11).

자오팅양 이외에도 다수의 학자들은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서구의 문화적 헤게모니에 맞설 수 있는 지적 헤게모니를 증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중국적 특색의 국제관계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정비젠(鄭必堅)과 같은 이러한 필요성을 서구의 문화 권력에 대해 중국의 ‘담론 권력’(화어권, 話語權, discourse power)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 지식과 학문의 권력정치적 측면을 부인하지 않고, 새로운 이론과 개념의 개발을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명표준을 두고 벌이는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른 많은 중국학자들도 이러한 의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국제정치 내에서 담론 권력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중국 특색의 문화적 가치를 전파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차원의 담론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와 가치의 영역에서 세계의 발전방향을 주도하며, 그 결과 전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언급이나 “어떻게 미국의 담론 패권에 맞설 것인가? 현재 현실주의는 국제정치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력정치’ 문화 내에서 중국의 ‘자애로운 문화’(benevolent culture)가 부상하고 국제정치문화의 주류로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등의 언급은 중국학자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Lynch 2009, 98-101).

물론 이러한 중국적 특색의 국제정치학을 통한 문명표준의 장악이라는 아이디어가 중국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국학계의 독자성 추구는 중국 정부의 최근 대외정책 기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이를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이래 후진타오(胡錦濤)의 중국정부는 ‘화해세계’(和諧世界, harmonious world)의 건설을 독자적인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했는데, 다수의 중국학자들이 이 슬로건을 이론적, 철학적으로 세련되게 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성과물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독자성 추구가 학문 담론의 독자성 추구를 촉진하고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후진타오의 중국정부가 화해세계의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방어적인 목적에서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2000년대 초 중국정부는 정비젠에 의해 처음 제안되고 정식화된 ‘화평굴기’(和平崛起, peaceful rise)를 공식적인 대외정책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슬로건은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의 의도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얼마 못 가 폐기되었다(Glaser and Medeiros 2007). 서구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위협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로서는 중국



의 경제성장이 다른 국가들에 일종의 지정학적 위협으로 비춰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전국면의 지속을 위해 중국은 적어도 당분간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행사의 한계와 제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다. 이는 적어도 21 세기 첫 20 년은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에 기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화통신에 실린 〈사회주의 초기 단계의 역사적인 과제와 중국의 외교정책에 관한 몇 가지 이슈〉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웬자바오 수상은 “기회는 드물고 잠시 동안 머물기 때문에 일단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 중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그러한 기회가 지속될 것인지는 대내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하면서 발전의 지속을 위해 대외정책에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Masuda Masayuki 2009, 62-63).

하지만 신중함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수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그와 같이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신중한 대외정책은 다른 국가들과의 조심스러운 관여와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Masuda Masayuki 2009, 59-60). 이는 화해세계의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후진타오의 2005 년 유엔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후진타오는 화해세계의 의미를 정치, 경제, 문화, 안보, 환경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들은 동등한 기반 위에서 국제관계의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균형 잡힌 발전과 이익의 공유, 모두에게 득이 되는 진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는 공통의 토대를 찾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고, 세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류문명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환경 이슈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은 인류의 단 하나뿐인 집인 지구를 잘 보살피기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Hu Jintao, 05/09/16).

후진타오는 이러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차원의 방안으로 첫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안보체제, 둘째, 협상과 협의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셋째, 세계 모든 국가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보다 큰 책임, 넷째, 모든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포용성(inclusiveness)의 확립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Shen Ding 2008, 197). 실제로 후진타오의 화해세계론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개도국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각종 지역협력제도를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려는 중국정부의 노력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중국학자는 이와 같은 화해세계론을 ‘풍부한 개념과 이론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유연성을 갖춘 구체적인 전략적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는 미래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개념적 도해’로 지칭했다(Su Hao 2009, 29). 하지만 사실 화해세계의 기본적인 성격에 관한 후진타오의 위와 같은 다소 평면적인 정의로부터 그러한 심오한 의미와 의의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얼핏 보기에는 협력, 협의, 평화 등 클리셰(cliché)에 가까운 단어들이 수 차례 나열되어 되풀이되고 있을 뿐 논리적인 정합성이나 혁신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진부하기까지 한 화해세계의 개념에 의미를 불어 넣고 혁신적인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학자들과 지식인들의 몫이었다. 그리하여 학문 담론으로 정식화되고 세련화된 화해세계론은 대외적으로 중국의 평화적이고 협력 지향적인 대외정책을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구의 문화 권력에 대항한 중국식 문명표준의 새로운 전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푸단 대학교의 왕이웨이(王義桅)는 이와 같은 화해세계론 학문 담론화의 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는 화해세계를 세 가지 서로 구별되는 차원으로 나눈다. 첫째, 지역 차원의 기구와 제도를 통한 협력을 의미하는 ‘질서화해’(秩序和諧)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세력균형을 넘어서 호혜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역량화해’(力量和諧)가 있다. 셋째, 문화적인 차원에서 왕이웨이는 ‘가치화해’(价值和諧)를 언급하는데, 이는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자신의 가치나 규범을 강요함이 없이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의미한다(Lynch 2009, 96-97).

보다 최근에는 중국의 전통사상, 특히 유교사상의 관점에서 화해세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동’(大同)이나 ‘화이부동’(和而不同) 등의 유교 개념을 바탕으로 화해세계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공자가 이르시되 군자는 다양성을 인정하나 지배하지 않으려 하고(하나>하고) 소인은 지배하려 하나 공존하지 못한다”(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혹은 “공자가 이르시되 군자는 공지를 가지되 다투지 않으며 무리와 어울리되 편당하지 않는다”(子曰 矜而不爭 羣而不黨)와 같은 논어(論語)의 구절들이 화해세계의 철학적 정당화를 위해 즐겨 인용된다.(Callahan 2004; Yu 2010) 특히 앞서 언급했던 자오팅양의 《천하체계》는 이러한 시도의 선구자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다.

사실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자오팅양의 《천하체계》가 화해세계라는 중국 대외정책의 목표를 정당화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씌어진 것은 아니다. 《천하체계》는 후진타오의 2005년 유엔연설이 있기 약 다섯 달 전에 출간되었다. 따라서 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면 자오팅양의 저작이 화해세계론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화해세계론이 《천하체계》로부터 일정한 영감을 얻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물론 양자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윌리엄 캘러한(William Callahan)이 이 책에 대한 매우 비판적인 서평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천하체계》는 결코 순수하게 학술적인 성격의 서적이 아니다. 오히려 이 책의 성공의 상당 부분은 자오팅양이 ‘공적 지식인(public intellectuals), 국가 지식인(state intellectuals), 정치지도자로 구성되는 담론 네트워크’ 내에 자신의 논의를 의도적으로 위치시켰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Callahan 2008, 757-759).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천하체계》를 화해사회론을 둘러싼 학문 담론의 일부 분으로 간주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천하체계》에서 자오팅양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은 것은 국민국가(nation-state) 중심의 국제관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 전통 사상에서 사유의 중심 대상이었던 ‘천하’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천하는 세계를 소유하는데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이다. 즉 “천하에는 밖이 없다.”(天下無外) 이와 같이 사유의 가장 큰 단위로서의 천하를 통해 세계를 이해할 경우, 자오팅양이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인용하여 지적하듯이 ‘천하로서 천하를 이해’할 경우, 국가들 간, 민족들 간 대립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천하 내에서는 모든 차이가 상대화되어 ‘원근(遠近)과 친소(親疎)’의 관계만이 남기 때문이다(자오팅양 2010, 72-78). 반면, 천하의 관점을 택하지 않는 한, 즉 천하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관점에서 세계문제를 판단하는 한, 국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경우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의와 협상 또는 충돌을 통한 해결책 이상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자오팅양 2010, 133).

이러한 주장들과는 별도로 자오팅양의 《천하체계》는 모호한 표현들과 용어들이 남발되고 있어 핵심 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 자오팅양의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저작이 발휘하는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는 매우 분명해 보인다. 첫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천하 관념에서 보면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평화의 필요성에 관한 화해세계론이 단순한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철학적 깊이를 얻게 된다. 둘째, 자오팅양의 천하론은 서양적 사유에 대한 중국적 사유의 우위, 더 나아가서는 서구적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적 세계질서의 우월성을 암암리에 옹호하고 있다. 이는 자오팅양의 저작이 중국적 문명표준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천하체계》에서 자오팅양은 천하 개념에 관한 자신의 논의를 중국의 사상 전통 내에 위치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주요 사상가들의 견해와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일정한 ‘보편성’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천하체계》 전체를 통해 오늘날의 중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자오팅양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는 하다. 캘러한이 지적하듯이 〈천하체계론〉은 ‘서구의 국가중심주의를 비판하는 비(非)서구의 대안이 또한 얼마나 국가중심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Callahan 2008, 759). 하지만 그러한 의도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한편으로 자국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국의 학문 담론이 이제 ‘깊이와 넓이’를 획득하기 시작했다는 점 또한 간과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중국적 보편주의 혹은 서구의 그것을 대체하는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보편주의를 지향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징표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한 보편주의가 구성되는 방식은 아직 서툴기 이를 데 없다. 여전히 서양적인 것에 대한 네거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며, 이는 장차 세계 문화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의 전조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 들어 중국의 지식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식 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의 존재가 경탄의 대상이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서구 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이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컨센서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결합한 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Halper 2010). 특히 전 세계 많은 개도국들에게 중국의 발전은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빠른 속도의 경제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고 있다(Suisheng Zhao 2010, 432). 보다 궁극적인 차원에서 경제위기의 시대에 중국 모델의 높은 인기는 발전을 위해 어떤 정해진 모델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모델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각자의 주어진 여건에서 시작해서 네 자신의 길을 가라”(從國情出發, 走自己的路)는데 있다는 것이다(Breslin 2009, 827).¹ 민주주의나 인권, 법치 등 도덕적인 원칙들의 수용을 강조하는 서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아프리카나 남미, 아시아의 개도국들과의 관계에서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이들 국가들의 중국 모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다(Suisheng Zhao 2010, 433).

오늘날 상당수 중국 학자들은 중국식 발전 모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일반적인 차원의 ‘중국 모델’을 정식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아직까지는 ‘국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자국민들에게 정부와 공산당의 업적과 성취를 정당화하는 목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서구의 경험과의 비교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는 언젠가 ‘대외용’이 될 수 있고, 더군다나 대안적인 문명표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견해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판웨이(潘維)는 최근 출간된 《중국모델: 인민공화국 60년을 읽는다》의 서문에서 ‘중국식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정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전체 인민의 복지를 책임 지는데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켜도 합당’한 것이다. ... 서양 근대 이후의 관과 민의 관계에 대한 이념은 ‘권리’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관과 민의 관계에 대한 이념은 ‘책임’을 핵심으로 한다. 책임관념은 중국 관리 사회에 있어 불변의 도리였고, 관과 민의 관계의 근본이었으며, 관권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근본이기도 했다. ...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강렬한 도덕적 색채를 띠고 있다. 도덕적 책임을 상실하면 정부는 곧 공신력을 잃고 인민의 공동이익을 구축할 수 없게 된다. 민본적 민주주의는 인민대표가 ‘초당파적’일 것과 백성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담당할 것을 요구한다. 서양 민주주의는 세력이 강한 사회 집단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익집단의 정치적 대표들 간의 경쟁은 서양에서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집단적인 권력과 이익에 대한 쟁탈인 당쟁 정치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판웨이 2010, 70-72; 왕사오강 2010).

여기에서 판웨이의 의도는 선거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이에 실패한 정부는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판웨이가 보기에 시민의 복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주체는 ‘초당파적인’ 정부/관료들이며,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에 실패하지 않는 한 이들을 선거를 통해 교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는 파당과 이익집단들 간 쟁투와 경쟁의 장(場)일뿐이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자오팅양과 같은 이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그는 ‘인민의 마음은 언제나 직관적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로 표현’되기 때문에 숫자화된 ‘정확한’ 통계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는 민심을 효과적이면서도 필연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전통 사상 역시 민주보다는 민심을 지향했기 때문에 민주 개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중국 철학의 근본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자오팅양 2010, 46,84,209).

판웨이와 자오팅양의 중국식 민주주의론이 중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 지식인/학자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긴밀하기는 하지만 현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함에 있어서 그러한 긴밀성은 유난히 두드러져 보인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감추어지지 않은 채 드러나 있을망정 그러한 노골적인 옹호론을 체계화하고 세련되게 하려는 중국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발전의 ‘길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찰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바람직한 정치제도의 원칙에 관한 대안적인 문명표준의 제시로 이어질 것인가? 아직 그럴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그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현재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 류샤오보(劉曉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문명표준의 장악을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권 국가들과 중국 간의 경쟁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내 보여주



고 있다. 노벨상수상위원회의 수상 의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적어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두 문화권 간 ‘문화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구문화권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서구적 문명표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법 위반을 이유로 투옥중인 ‘범죄자’에 대한 노벨상 수여는 자국의 주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중국식 문명표준의 정당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민주주의 증진 정책과 중국의 화해세계론,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옹호는 문명표준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경쟁과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아직 경쟁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문화적인 위상을 거의 전적으로 방어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고, 미국은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서 스스로의 활동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그 결과 강대국 간 힘의 분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이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인 것이라면 그런 경우 중국의 문화적 공세는 더욱 강화되는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점차 수세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하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차원의 힘의 크기에 따라 한 국가의 ‘문화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식 문명표준이 세계문화질서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명표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자국의 문화가 보편적인 문화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아직까지는 ‘중국식 보편주의’, ‘중국 특색의 보편주의’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 지식인들이 중국정부와 명시적, 묵시적으로 지나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문화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러한 ‘상대주의적 보편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세계문화질서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주(註) ---

¹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발전 모델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핵심 원칙 10 가지 중 8 가지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Kennedy 2010, 470).



참고문헌

- 왕사오강. 2010. 김갑수 역. 《민주사강 : 중국, 경제성장의 길목에서 민주주의를 묻다》. 서울 : 에버리치 홀딩스.
- 자오팅양. 2010. 노승현 역. 《천하체계 : 21 세기 중국의 세계인식》. 서울: 길.
- 판웨이. 2010. 김갑수 역.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모델론》. 서울 : 에버리치 홀딩스.
- Moïsi, Dominique, 2010. 유경희 역. 《감정의 지정학: 공포의 서양, 굴욕의 이슬람, 희망의 아시아》. 서울: 랜덤 하우스.
- Alessandri, Emiliano. 2008. "World Order Refounded: The Idea of a Concert of Democracies." *International Spectator* 43, 1.
- Ayers, Alison J. 2008. "Imperial Liberties: Democratisation and Governance in the 'New' Imperial Order." *Political Studies* 57.
- Breslin, Shaun. 2009. "Understanding China's regional rise: interpretations, identitie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Affairs* 85, 4.
- Callahan, William. 2004. "Remembering the Future - Utopia, Empire, and Harmony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Theory."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0,4.
- Callahan, William. 2008. "Chinese Visions of World Order: Post-Hegemonic or a New Hegemon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0.
- Carothers Thomas. 2007. "U.S. Democracy Promotion During and After Bush."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lark, Ian. 2009. "Democracy in International Society: Promotion or Exclusion." *Millennium* 37,3.
- Daalder Ivo and James Lindsay. 2007. "Democracies of the world unite." *Public Policy Research*.
- Ding, Shen. 2008. "To Build a "Harmonious World": China's Soft Power Wielding in the Global South."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3,2.
- Fukuyama Francis and Michael McFaul. 2008. "Should Democracy Be Promoted or Demoted?" *Washington Quarterly* 31,1.
- Glaser, Bonnie S. and Evans S. Medeiros. 2007. "The Changing Ecology of Foreign Policy-Making in China: The Ascension and Demise of the Theory of "Peaceful Rise"." *China Quarterly* 190.
- Honson, Christopher. 2008. "Democracy as Civilisation." *Global Society* 22, 1.
- Homolar-Riechmann, Alexandria. 2009. "The moral purpose of US power: neoconservatism in the age of Obama." *Contemporary Politics* 15.2.
- Halper, Stephen. 2010.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Hu Jintao. 2005. "Hu Jintao's Speech at the Summit Meeting of the United Nations 60th Anniversary." September 16.
- Ikenberry, G. John and Anne-Marie Slaughter. 2006. "Forging a World of Liberty under Law: US National Security in the 21th Century." The Princeton Project on National Security.
- Kagan, Robert. 2008. "The End of the End of History." *New Republic* April 23.
- Kagan, Robert. 2007. "End of Dreams, Return of History." *Policy Review* August/September.



- Katzenstein, Peter J. ed. 2010. *Civilizations in World Politics: Plural and Pluralist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Kennedy, Scott. 2010. "The Myth of the Beijing Consensu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 65.
- Lynch, Deniel. 2009. "Chinese Thinking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alism as the Ti, Rationalism as the Yong?" *China Quarterly* 197.
- Masayuki, Masuda. 2009. "China's Search for a New Foreign Policy Frontier: Concept and Practice of "Harmonious World"." In *China's Shift: Global Strategy of the Rising Power*, ed. Masafumi Iida. The National Institute of Defense Studies, Japan.
- Nau, Henry R. 2008. "Conservative Internationalism." *Policy Review* August/September.
- Nau, Henry R. 2010. "Obama's Foreign Policy." *Policy Review* April/May.
- Rachman, Gideon. 2009. "Democracy: The Case for Opportunistic Idealism." *Washington Quarterly* 32, 1.
- Schlesinger, Stephen. 2009. "Why a League of Democracies Will Not Work." *Ethics and Foreign Affairs*.
- Su Hao, 2009. "Harmonious World: The Conceived International Order in Framework of China's Foreign Affairs." In *China's Shift: Global Strategy of the Rising Power*, ed. Masafumi Iida, 29.
- The White House. 2010.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Yu, Kam Por. 2010. "The Confucian conception of harmony." In *Governance for Harmony in Asia and Beyond* ed. Julia Tao et al. London: Routledge.
- Zhao, Suisheng. 2010. "The China Model: can it replace the Western model of modern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9, 65.
- Zakaria, Fareed. 2008. "Obama, Foreign Policy Realist." *Newsweek* July.
http://newsweek.washingtonpost.com/postglobal/fareed_zakaria/2008/07/obama_foreign_policy_realist.html



필자약력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김준석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논문으로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국제정치논총〉, 2008), “규범권력과 유럽연합”(〈국제지역연구〉, 2009),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국제지역연구〉, 2009)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 1월 아시아안보연구원(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연구원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김양규 아시아안보연구원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